

우리 사회 예술가의 현주소와 문제 故구본주 사건을 중심으로

안 태 호 · 구본주대책위 대변인, 민예총 정책기획팀

선

거는 블랙홀과도 같다. 선거철만 되면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의제들이 선거 안에 휩쓸려 들어가기 때문이다. 올해 지자체 선거는 조금 낯설게 느껴진다. 거의 모든 후보들이 문화도시를 앞세운 전략을 표방하고 있는 까닭이다. 어느새 한국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이 문화를 이야기하는 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어버렸다. 지자체 선거의 핵심전략이 문화정책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물론, 그 진정성이나 내실은 별개의 문제지만 문화都市는 대한민국의 화두가 되었으며 문화콘텐츠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주문처럼 보일 정도다.

그런데 예술은? 혹자는 예술에 대한 푸대접이 ‘문화’에 대한 강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예술지원정책에서 사용자/향수자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가뜩이나 구석에 몰린 예술을 더 수렁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시민들이 향유할 문화의 핵심적인 콘텐츠는 여전히 예술이다. 물론,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만을 그 대상으로 삼은 문화예술정책은 이미 낡은 틀이 되어버린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결국, 예술이나 문화나라는 이분법은 문화발전이나 예술진흥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 예술과 문화가 만나는 어느 지점에서 우리의 논의는 시작되고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故구본주 사건, 우리 사회 예술가 문제 담은 압축파일

한국사회에서 예술가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물음은 여러 가지 난제를 동반한다. 이는 한국사회에 대한 성격규정은 물론 예술이 무엇이고 예술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2005년 일어난 조각가 故구본주와 관련된 소송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예술과 예술가의 가치와 역할, 위상과 지위를 묻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진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3년 9월 29일 새벽, 구본주는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등졌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 상황이었고, 운전자 역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운전자가 가입해 있던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소송이 진행되어 1심에서 피해자 과실 25%, 정년 65세, 예술 전문가 경력 5~9년 인정 등을 골자로 한 판결을 내렸다. 보험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항소했다. 항소당시 보험회사가 내세운 조건은 피해자 과실 70%, 정년 60세, 예술가 경력 불인정(도시일용노임에 준한 배상) 등이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으며, 상당한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조각가에게 정년 60세는 과도하다는 것과 실질소득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여기서 도시일용노임이란 실제 일용직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주부나 백수를 비롯한 무직자들의 최소수입을 의미하는 보상기준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은 예술가들이 항의의 뜻을 표했고, 결국 대책위를 꾸려 보험회사를 상대로 싸움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예술가들의 시위가 줄을 이었고, 예술과 예술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대기업의 무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 사건을 다루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보험회사의 항소취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4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대책위의 활동 끝에 결국, 보험회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유족과 합의를 하기에 이른다. ^{구본}

주 소송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 자체로 예술가들이 어떻게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내고 조직화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보고서이다. 사건의 발단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진행상황과 관련된 내용들은 구본주 대책위 온라인 커뮤니티(<http://cafe.naver.com/gubonjuartright>, <http://cafe.naver.com/gubonjuartright>)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구본주 소송사건의 전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사실, 생각해 보면 보험금과 관련한 송사는 매일처럼 뉴스지상을 달구는 이야깃거리이므로 별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이번 사건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사회구성의 복잡화는 어쩔 수 없이 체계와 위계를 만들고, 체계와 위계는 선택과 배제를 그 기본으로 한다. 예술가라는 집단에 대한 선택과 배제, 정년에 대한 선택과 배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택과 배제. 구본주 사건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압축파일과도 같았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예술가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예술가의 정년이나 예술가의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주었다. 즉, 예술가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간략한 구분은 존재한다손 쳐도 그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은 희박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예술가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곧 예술가 개개인, 자신들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동시에 예술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기도 했다. 예술가는 누구인가, 예술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해야 하는가의 문제,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까지, 필연적으로 이는 예술이 무엇인가, 예술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예술은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지는가라는 질문과 직결되는 물음들이다.

故구분주 사건이 남긴 사회적 의제들

이런 물음들은 사건종결 이후 진행된 몇 차례의 토론회들에서 계속되어 확인되고 확장되었다.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사건이 마무리 된지 한 달 만에 진행된 민예총의 토론회였다. 「예술, 예술가, 예술가 정책-구분주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 토론회는 구분주 사건이 어떤 사회적 의제들을 남겼는지에 대한 첫 토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예술의 사회적 가치, 예술가의 존재 규정, 예술가 정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예술시장의 합리적 재편에 대한 문제의식과 예술가들의 현황에 대한 연구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안태호(구분주 대책위 대변인)는 〈구분주 소송, 무엇을 남겼나?〉를, 김준기(전시기획자)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를, 이명원(문학평론가)은 〈예술가 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각각 발표했다. 김준기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역설적인 말로 현재의 상황을 압축하여 보여주었다. 자본주의 하에서 예술이 상품의 형태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 예술의 속성을 타협한 결과물을 내온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고, 결국 이는 시장과 비타협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한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명원은 ▲문화적 공공성의 극대화를 위한 예술의 생산, 매개, 수용간의 균형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최소한의 제도적 규정 또는 헌장의 필요성 ▲예술노동의 유형과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지표로 표준화할 수 있는 기준 설정 노력의 필요성 ▲기초예술인의 예술과 생활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예술인들의 자기성찰 등을 예술가 정책의 입안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했다. 토론회 내용은 「예술, 예술가, 예술가 정책-구분주 사건을 중심으로」 자료집 참조.

같은 해 12월 15일에 인천민예총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 「예술인과 한국사회」에서는 좀 더 진전된 논의들이 밀도있게 진행되었다. 안태호가 〈구분주 사건을 통해 본 한국사회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현황 및 대안적 실천 방안〉을, 박신의(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가 〈예술인사회보장제도 논의를 위한 쟁점〉을 각각 발표했다. 박신의는 작가에 대한 창작지원이 예술가에 대한 보호논리가 아니라 “예술활동이 궁극에는 사회의 기반이 되고, 문화산업과 관광 재원으로도 파급

되는 것이어서 그 경제적 가치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어진다”며 예술이 사회적 노동으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동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 유네스코의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를 인용하며 현재 우리 사회의 예술 개념이 협소함을 지적하고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가의 권리, 그에 대한 지원의 근본적 이념을 예술가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기했다.

토론회에서는 예술의 효과나 가치를 증명하는 부분에 있어 예술교육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되었다. 예술교육이 예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하지만 실제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직업까지도 사회적 활동과 가치로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내용이었다. 한편, 예술가의 범주와 예술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문화예술의 영역에서만 이야기되어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다양한 학제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내에 예술가에 대한 내용규정이 미비하고 예술인복지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문화기본법과 기초예술진흥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제기되었다. 이는 현재 5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현장과 연동되어 주목해볼 만하다.

토론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문문화비평」 2005년 하반기 제18호 참조

현재 가장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현실적인 이야기가 오고가는 부분은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다. 서울연극협회와 연극인복지재단

연극인복지재단은 2005년 5월

연극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구로 배우들이 출연료 1%씩을, 제작자들이 배포수입 1%씩을 모아 연극인들의 복지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졌

다. 이사장은 연극배우 박정자 씨가 맡았다.

은 올해 연극인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06 한마음 축제 기간 중에 「예술인 복지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예술인 복지제도에 대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접근,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신익의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적 접근의 쟁점>을, 이승엽(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이 <연극인 복지와 연극인 복지재단의 전망>을, 조동희(재단법인 과천한마당 축제 기획홍보실장)가 프랑스 예술가 조합의 현황을 각각 발표했다. 이 중 가장 구체적인 제안으로 눈에 띄는 것은 이승엽의 발표였다. 이승엽은 예술가의 복지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로 “예술가들의 사회적 여건을 보장하는 일이 문화·예술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논의에 비해 가시적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 현실”을 들었다. 그는 연극인들의 위기감이 높아진 이유로 내적동기의 약화와 외적동기 개선의 부진함을 꼽았다. 권위주의 시대에 예술이 누려왔던 배타적 사명과 선도적 역할 기능의 희석은 내적 동기의 약화를 불러왔고, 경제발달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예술가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이승엽은 이런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을 첫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



2005년 일어난 조각가 허구본주의와 관련된 소송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예술가 예술가의 가치와 역할, 위상과 지위를 물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예술가라는 집단에 대한 선택과 배제, 정년제에 대한 선택과 배제, 사회적 위치에 대한 선택과 배제, 구분주 사건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압축파일과도 같았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예술가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예술가의 정년이나 예술가의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준다.



기초예술연대의 출범과 함께 기초예술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에 대한 담론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었다. 그러나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인가. 기초예술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며 시민들과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술활동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일차원적 논의만 남은 것은 아닌가라는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구본주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은 예술가의 자리를 보여주는 사례, 예술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예술가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훌륭한 참고사례로 보인다.

제로 지적했다.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에 비정규 예술가들은 아예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비슷한 성격의 단기계약 노동자들과 함께 가입범위에 포함되도록 고용보험 체제를 변화시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미 한국의 고용보험이 일용직 노동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범위에 단기 계약 예술종사자의 범주를 설정한다면 비현실적인 제안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여지가 있지만 공공재원이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만이 구조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승엽의 제안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예술인 복지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참조

문화예술인 정책의 허와 실

사실,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정책의 논의는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기초예술 활성화 논의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2003년 기초예술연대의 출범을 전후로 해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에서는 경쟁적으로 문화예술인의 복지와 생계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내놓은 바 있고, 문화부는 2004년 기존의 예술지원 정책들을 거의 집대성했다고 보이는 새예술정책을 통해 기초예술의 창작기반 강화, 예술의 창작·유통·소비 각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예술의 자생력 증진 등을 기본방향으로 발표했다.

문화부는 2003년 예술인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2003. 이 연구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의 기초연금제나 예술인공제회 등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설계를 위한 연구 예산 자체가 전면 삭감되는 등 사회적 합의수준의 허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올해에는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방식은 예술인 공제회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제회 자체는 경조사를 비롯한 특별한 사안들에 대한 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보장이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 역시 사회보장제도의 출발점으로 삼고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역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므로 진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 최근 스크린쿼터 축소와 함께 세간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은 영화산업 현장 스태프들의 처우개선 문제 역시 주목해 볼 만하다. 한국영화산업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양적으로 팽창하는 외증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두드러진 현장 스태프들의 문제는 스크린쿼터 논란 외증에서 영화계 내의 양극화 문제로 떠올랐다. 이미 2001년 현장 스태프들의 모임

비둘기 등지 결성 이후, 2002년 한국영화조감독협회, 2004년 한국영화조수연
대회의가 결성되었고 2005년 12월에는 마침내 영화산업노조가 탄생했다. 조
만간 이들은 영화계 최초의 단체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창
작’ 현장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 무마되던 현실이 조금
씩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4월 14일에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천영세
의원실이 주최한 「영화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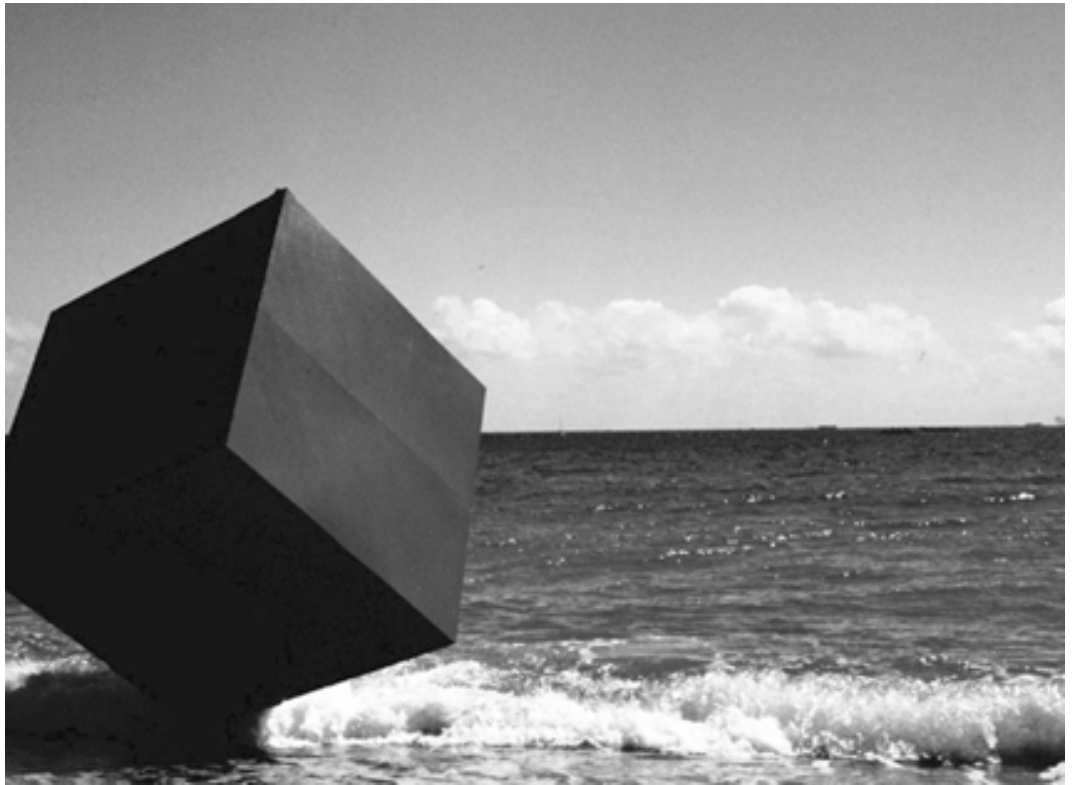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영화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참조

토론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상시적인
실업의 고통, 상습적인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4대보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점 등 열악한 영화스태프의 근무여건에 문제의식을 함께했다. 그러나 영화산
업의 노동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바랬던 영화노조 측과 영화산
업 전반의 구조조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용자 측의 시각차이로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컴퓨터스 안효원 기자 “영화노조, 제작자측과

공개석상에서 만나 「영화산업 노동환경 개선 정책토론회」 열려”, 2006년 4월 17일

예술인 사회보장과 관련된 하나의
사례로 영화 스태프들의 활동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구본주, 어떤 선택, 2000, 3500x3500x5500, 철



작업 예술활동을 통한 예술가들의 과제

예술가의 사회적 위상과 지위는 한편으로 활동으로 증명할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역사적 질곡에서 주류 예술인들이 취해 온 사회적 태도와 역할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친일예술로부터 권위주의 정부에 영합하여 개인의 영달만을 유지하는 예술인들의 태도는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예술의 근본을 망각한 부적절한 처신들이기도 했다. 물론, 미학적 입장이나 태도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사회와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술은 존립근거가 희박해지기 쉬울 것이다. 기초예술연대의 출범과 함께 기초예술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에 대한 담론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었다. 그러나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인가. 기초예술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며 시민들과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술활동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일차원적 논의만 남은 것은 아닌가라는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구본주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은 예술가의 자리를 보여주는 사례, 예술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예술가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훌륭한 참고사례로 보인다.

구본주의 유족은 올해 3월, 두 가지의 시도를 했다. 하나는 미군기지 확장과 주민들의 거주권 문제로 분쟁이 일고 있는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구본주의 작품이 참여하는 전시에 약간은 도발적인 디스플레이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둘 다 어떻게든 사회와 주민들과 소통을 의도하고 추진한 일들이었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평택에 세워진 구본주의 대표작 [동학농민혁명]이 주민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마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의 일부로 자연스레 위치한 것과는 달리 전시가 준비된 북촌에서는 엉뚱한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해프닝의 내용은 간단했다. 미술관 바깥에 설치한 구본주의 작품 [아빠의 청춘]이 철수당한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작품은 직장에서 밀려난 중년 가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거나하게 술을 걸친 늦은 귀갓길의 노상 방뇨, 삶의 무게와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풍경이다. 그러나 작품이 작품으로 이해되기도 전에 '성기노출'이라는 일반화된 누명을 쓰고 퇴출당해야만 했다. 지근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담하게도 성기를 만지는 장난까지 실행했다고 하니 학부모들의 우려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다.

북촌에서 해프닝이 벌어졌을 때, 몇몇 이들은 이것이 관객, 나아가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소통의 주체는 대중이어도 좋고, 시민이어도 좋다. 분명 하나의 소극에 불과한 일이었지만 작가가 작품으로



구본주 사건으로 새롭게 환기된 이 모든 문제들은 이론적 논의나 담론의 축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할 기준이나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한편으로, 예술가들이 직접 예술활동을 통해 증명하고 만들어갈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 사이에서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나 예술위원회 등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구본주라는 '문체적 개인'이 생산해 낸 담론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누군가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한 반응임은 분명했던 것 아닌가. 실제로 구본주의 유족은 학부모와 학교를 대상으로 간담회/토론회 등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학교 측의 무응답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이 해프닝은 아이들의 대법한 실행력과 감수성을 어른들이 따라잡지 못한 경우이지 싶다. 되레 아이들과 함께 작품의 의미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예술에 대해서 교육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성기노출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자연스레 성교육과 연계시키는 일이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배우는 쪽은 예술관과 성의식을 화해시키기 어려운 교사들과 학부모들이었겠지만 말이다. 단지 교육적인 콘텍스트를 넘어서 이 사건은 예술이 어떻게 사회와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다. 많은 이들은 예술가에 관대하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예술에 대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예술이 그들의 삶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인식의 혼란을 가져다준다면 어떻게. 결국 예술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대함은 예술이 자신들의 삶에 액세서리와도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줄 뿐이다.

결국 구본주 사건으로 새롭게 환기된 이 모든 문제들은 이론적 논의나 담론의 축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할 기준이나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한편으로, 예술가들이 직접 예술활동을 통해 증명하고 만들어갈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 사이에서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나 예술위원회 등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구본주라는 '문체적 개인'이 생산해 낸 담론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문화예술정책 담당자들이 이 논의에 귀를 기울이고 담론생산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 한편으로 예술가들 역시 사회적 소통을 백안시한 채 고립무원의 상태를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향후 더욱 여러 차원에서 정교하고 다양화된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